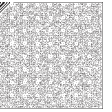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20. 5. 10 ~ 2021. 5. 9



발간사

문재인정부 5년 차를 맞아 대통령의 지난 1년 연설을 모았습니다. 아침마다 국민은 마스크를 썼고,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상황을 챙겼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하는 곳은 다르지만 국민과 대통령은 언제나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확인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뿐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분야를 점검하며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경제 현장을 모두 열세 차례 방문했습니다. 백신과 주사기, 소재·부품·장비, 우리 전투기 생산 현장도 빠짐없이 찾았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연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대면 정상외교가 정지될 수밖에 없었지만, 대통령은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를 제안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었습니다. 제75차 세계보건총회 초청 연설을 통해 우리의 방역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며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EU 정상회담과 ILO 글로벌 회담, 유엔 고위급회담 화상 참여와 G20 정상회의,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까지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으고,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국민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간절한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억하고 간호장교들의 헌신을 되새기며 우리 정부 초기부터 공들여온 보훈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라고 역설한 6·25전쟁 70주년 기념식 연설이 인상 깊습니다. 회복과 도약을 위해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난 1년, 불편을 감수하며 K-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신 국민께 대통령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힘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 안에 재진입했고,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3,000시대를 열었습니다. 남은 1년 문재인정부는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코로나19로 깊어진 불평등과 격차를 포용적 회복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성과도 있었고 당연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민을 생각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대통령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국민이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6월

대통령비서실장 유영민

음성변환 바코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리더기를
사용해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차례

2020년

2020. 5. 12	제25회 국무회의	8	2020. 8. 31	수석·보좌관회의	...	61
2020. 5. 26	제27회 국무회의	...	11	2020. 9. 7	수석·보좌관회의	...	63
2020. 6. 8	수석·보좌관회의	...	14	2020. 9. 8	제45회 국무회의	...	66
2020. 6. 9	제30회 국무회의	...	17	2020. 9. 14	수석·보좌관회의	...	68
2020. 6. 15	수석·보좌관회의	...	20	2020. 9. 22	제48회 국무회의	...	71
2020. 6. 23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		24	2020. 9. 28	수석·보좌관회의	...	74
2020. 6. 29	수석·보좌관회의	...	27	2020. 10. 5	수석·보좌관회의	...	77
2020. 7. 6	수석·보좌관회의	...	30	2020. 10. 6	제51회 국무회의	...	80
2020. 7. 7	제35회 국무회의	...	33	2020. 10. 12	수석·보좌관회의	...	83
2020. 7. 20	수석·보좌관회의	...	36	2020. 10. 19	수석·보좌관회의	...	86
2020. 7. 21	제37회 국무회의	...	39	2020. 10. 20	제53회 국무회의	...	89
2020. 7. 27	수석·보좌관회의	...	42	2020. 10. 26	수석·보좌관회의	...	92
2020. 8. 10	수석·보좌관회의	...	46	2020. 11. 2	수석·보좌관회의	...	95
2020. 8. 11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50	2020. 11. 3	제55회 국무회의	...	98
2020. 8. 24	수석·보좌관회의	...	53	2020. 11. 9	수석·보좌관회의	...	101
2020. 8. 25	제43회 국무회의	...	57	2020. 11. 17	제57회 국무회의	...	104
				2020. 11. 30	수석·보좌관회의	...	107
				2020. 12. 1	제59회 국무회의	...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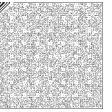
2020. 12. 7	수석·보좌관회의	...	113	2020. 12. 28	수석·보좌관회의	...	122
2020. 12. 14	수석·보좌관회의	...	116	2020. 12. 29	제63회 국무회의	...	126
2020. 12. 15	제61회 국무회의	...	119				

2021년

2021. 1. 5	제1회 국무회의	130	2021. 3. 16	제11회 국무회의	...	157
2021. 2. 1	수석·보좌관회의	...	133	2021. 3. 22	수석·보좌관회의	...	160
2021. 2. 2	제5회 국무회의	136	2021. 3. 30	제14회 국무회의	...	163
2021. 2. 8	수석·보좌관회의	...	139	2021. 4. 5	수석·보좌관회의	...	166
2021. 2. 15	수석·보좌관회의	...	142	2021. 4. 13	제16회 국무회의	...	169
2021. 2. 16	제7회 국무회의	145	2021. 4. 19	수석·보좌관회의	...	172
2021. 2. 22	수석·보좌관회의	...	148	2021. 4. 26	수석·보좌관회의	...	175
2021. 3. 2	제9회 국무회의	151	2021. 4. 27	제18회 국무회의	...	178
2021. 3. 15	수석·보좌관회의	...	154				



2020



제25회 국무회의

2020. 5. 12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방역·보건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합니다. 율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합니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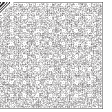
둘째, 과감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랍니다. 20년 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셋째, 치밀하고 섬세해야 합니다.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득과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



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국난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27회 국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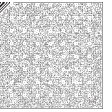
2020. 5. 26

우리는 지금 감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두렵지만,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보여 주듯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감염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위협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방역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집단감염의 재발을 막겠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일상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지 국민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방역수칙을 잘 실천한다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와 새로운 일상의 성공 여부는 결국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생활방역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주 고3 등교개학에 이어 순차적인 등교개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마음도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학교 밖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노래방·PC방 등 감염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확진자나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체계가 신속히 가동될 것입니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방역의 주체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낼 때 K-방역이 또 하나의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의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카드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께서 어려운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신 덕분입니다.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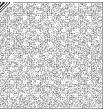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주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제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께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되어 어려운 국민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익명으로 기부한 소식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일자리인데,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부가 일자리를 지키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비든 기부든 그 뜻이 하나로 모아져 함께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6. 8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 증언에서부터 ‘위안부’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침묵의 벽을 깨뜨리고 “내가 살아 있는 증거다.”라고 외쳤고, 거리에서, 법정에서, 국내외 국제사회에서 피해의 참상을 알리고 정의로운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참혹한 성폭력 범죄가 세계에 알려졌고,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넘어 인류 보편의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논의가 발전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전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며 전 세계적인 여성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되어 당당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열일곱 분의 할머니만 우리 곁에 남아 계십니다. 너무나 많이 ‘위안부’ 진실의 산증인들입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

안부’ 운동의 역사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미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도 최초로 증언하였고, 연세 90의 노구를 이끌고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촉구하는 활동도 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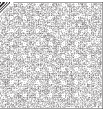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참혹했던 삶을 증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오신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합니다.

‘위안부’ 운동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성장해온 운동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스스로 여성인권운동가가 되어 세계 곳곳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시민사회의 많은 활동가가 연대했고, 시민들도 다 같이 힘을 보탰습니다. 어린 학생들까지도 수요집회에 참여했고, ‘위안부’ 문제를 숨겨진 과거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0년간 줄기차게 피해자와 활동가들,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은 결과 ‘위안부’ 운동은 세계사적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시민운동은 시민의식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지만,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입니다.

‘위안부’ 운동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와 화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숨김없이



밝혀지고 기록되어 자라나는 세대들과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새겨져야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의 선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도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회 국무회의

2020.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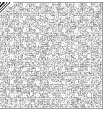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켜내는 데 성공하였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임시직,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하여 2차 고용안전망으로써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완화한 데 따라 위기 가구를 제 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전달체계를 꼼꼼히 점검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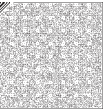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

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 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정책과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랍니다.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하여 상생 협력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들도 공공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큼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6. 15

수도권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어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 학교 내에 감염사례가 없고, 등교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선생님들이 의료진처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학생들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준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교 방역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로 일선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특히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냉방기 설치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 요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 주기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집단감염이 청년층에서 시작해서 노년층으로 확산되는 것도 우려되는 양상입니다. 치명률이 높은 노년층의 안전을 위해 노인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함께 병실도 충분히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승격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조직개편과 인력 충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를 당부합니다.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 강화로 전문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에도 차질이 없어

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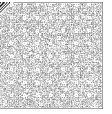
방역이 곧 경제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IMF에 이어 OECD도 올해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후퇴 속에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예외적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의 후퇴가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재정을 통한 강력한 경제회복 조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K-방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방역 성공이 곧 경제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는 생명을 지키는 길일 뿐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께서 방역의 주체이자 경제의 주체로서 생활방역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상봉했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습니다.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15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일직선으로 발전해 가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단절되고, 심지어 후퇴하거나 파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변동에 따라 우리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도 했으며, 남북관계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 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됩니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 나가길 바랍니다.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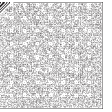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정신입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박정희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부의 10·4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합의들은 남

북관계 발전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입니다. 한반도 문제와 남북 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

2020. 6. 23

오늘 국무회의는 특별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세 단체장을 모시고 수도권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높은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의료진이나 국민께서 지치지 않도록 장기전의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을 잘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택한 투명·개방·민주의 원칙은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국민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나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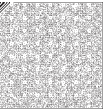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폭염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방역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잘해 주었습니다. 고위험시설 관리와 자가격리자 관리, 병상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은 물론 확진자 발생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며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창의적 사고와 신속한 현장대응은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방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해서도 지역감염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춘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질 것입니다.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 자금난에 겪으며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과 기업들, 경제위기로 더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경기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가뜰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습니다.

온 나라가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역요원들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고, 가계와 기업 모두 사활을 걸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난을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19 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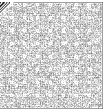
2020. 6. 29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가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 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 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번 주는 위축된 소비와 관광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카드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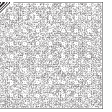
있습니다.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합니다.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휴가 기간을 분산시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7. 6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빛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입니다.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삭감·조정하여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한 5,000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 증액,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4,000억 원 추가 지원,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을 전제로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000억 원의 간접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그 뜻을 살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제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2차 추가경정예산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습니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은 92.3%,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은 96%를 집행하는 등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여 왔

습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지원대책을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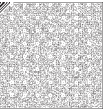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 속에 세계 각국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는 목표이고,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국민께서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 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2차 대유행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정부와 의료진, 국민께서 있는 힘을 다해 선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



방면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고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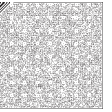
제35회 국무회의

2020. 7. 7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주 앉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습니다.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겨 있습니다.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노사의 고통 분담과 상생 협력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온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력확충 등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추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합니다.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 가겠습니다. 최대 90%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여 5,0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3차 추가경정예산에도 이미 반영했습



니다.

앞으로 정부는 잠정 합의의 내용대로 고용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노사관계도 발전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통적인 노동과 일자리가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노사정 협의과정에서도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한 부분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더욱 절실합니다. 서로 양보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최근 체육계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쁩니다.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입니다.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수가 경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따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7. 20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이미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투자와 가계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삼고, 기업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6개월이 되는 오늘 국내 감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내 지역감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명, 20명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대

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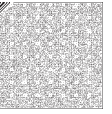
하지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와 협력하여 민간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에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정부가 처음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투자처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입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1조 원 이상으로 출발하여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



체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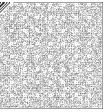
제37회 국무회의

2020. 7. 21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입니다.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됩니다.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단순히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주민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 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



어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기업·대학이 함께 협력하며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혁신을 주도하여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서 지역의 다양한 시도가 모범을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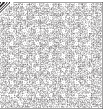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7. 27

며칠 전 정부는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기업의 건설현장에 종사하던 우리 노동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 왔습니다. 이라크의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으나, 귀국자 전원이 안전하게 격리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감염을 유발할 위험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지난 주말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다섯 명을 한 달여 만에 무사히 석방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위협에 처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7개국에는 정부가 직접 특별수송기뿐 아니라 군용기, 대통령 전용기까지 투입하며 교민 2,000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부정기항공기를 증편하거나 타국의 임시항공기 탑승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115개국에서 4만 3,000명의 안전한 귀국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 주고 있는 우리의 특별한 강점은, 해외 위험지역에서 귀국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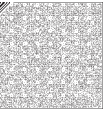
재외국민을 위한 시설관리와 격리, 진단과 치료 등 모든 면에서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가동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방역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재외국민의 보호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직 해외 건설현장에 남아 일하고 있는 잔류 노동자 1만 2,000명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도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것이 국민의 삶에 위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어두운 마이너스 역성장의 터널을 벗어나 성장을 반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3분기부터 경제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도 2분기를 저점으로 6, 7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 주고 있어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경제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수는 이미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3분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이어 ‘대한민국 동행세일’ 효과로 비대면 판매는 물론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 백화점 등 전 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여객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주요 여행지의 숙박 예약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관광도 서서히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스포츠 직접 관람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 활발히 일어날 것입니다.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 또한 지친 국민께 휴식의 시간이 되면서도 내수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의 감소가 경제회복에 가장 큰 제약인데 7월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시스템 반도체, OLED, 휴대폰 부품품 등은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친환경 미래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도 좋은 흐름입니다. 전례 없이 멈춰 섰던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더 어려움을 단시일 안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경기반등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국가로 대전환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에 힘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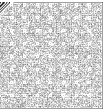
정부는 3분기를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고 경제반등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처럼 경제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호우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재산상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화되어 집중호우가 다시 내릴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관련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침수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책 마련을 꼼꼼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 지하철도의 인명사고를 큰 교훈으로 삼으면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주민대피 준비와 함께 인명구조와 응급복구에 필요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8. 10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 침체에 더해 이상기후까지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에서는 모범,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 가고 있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작은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 보면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위기 극복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하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지역을 추가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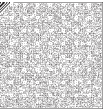
재난 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합니다.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일대의 폭우피해뿐 아니라 시베리아는 8만 년 만의 고온 현상, 유럽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



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둘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자금을 막는 등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 불안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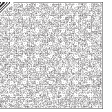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독일·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 나가는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랍니다.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

2020. 8. 11

정부는 국민과 함께 6개월 넘게 코로나19와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신 덕분에 우리는 국경과 지역봉쇄 없이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 국가가 되었고, 경제에서도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시기에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를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로 개최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장마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늦게까지 지속된 장마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예년의 장마와는 양상부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가며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산사태와 매몰, 제방 유실과 범람 등에 의한 침수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규모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안전관리 시

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지만, 기상이변에 따른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수천 명 발생했습니다.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이재민들에게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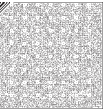
막바지이지만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지반이 매우 약화되어 있고, 댐과 하천의 수위도 최고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집중호우가 더해지면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마가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제방 붕괴에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위험지역에서 사전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뢰가 발견되어 주민들의 불안이 큼니다. 지뢰탐색에 충분한 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제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댐과 제방 등의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충분한 재정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지원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이후 병충해 확산을 막고, 농작물 생육과 약



제 지원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공공비축물량 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언제든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높이고 시설물을 보강해 왔지만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한편 피해 시설물 복구과정에서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닥칠 재난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SOC 디지털화를 통해 주요 시설물의 재난대비 관리·통제 기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조절 통제를 자동화하는 하천과 댐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 하나인 SOC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응체계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경고가 적기에 전달되지 못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산사태에서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하는 매뉴얼을 더욱 세밀히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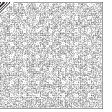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에 처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웃이 어려울 때마다 ‘남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코로나19 대응도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악의 물난리를 이겨내는 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가 어려운 국민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8. 24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따르기 힘든 신속한 검진과 역학조사, 철저한 격리와 빠른 치료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추가 확산을 막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국경봉쇄, 지역봉쇄, 경제의 멈춤 없이 이뤄낸 성과로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찬사를 받았고, 그 덕분에 경제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국민께서도 우리 자신의 역량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지금 맞이한 최대의 위기 역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행정 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협조하지 않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께 끼친 피해가 너무 큼니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숨 돌리다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께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행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19 진료 필수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

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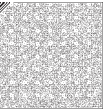
지금의 비상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국민께서는 휴가나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감염의 폭증을 막아 주셨습니다. 대다수 검진 대상자들도 신속한 검진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종교계도 대부분 비대면 예배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국민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19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특별재난지역을 추가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



향하였습니다. 피해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께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됩니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입니다. 국민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43회 국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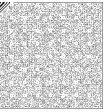
2020. 8. 25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의 반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활력을 되찾던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방역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경제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동안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놓았습니다.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277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습니다.

정부의 비상경제 조치들은 고용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중소기업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으로써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점

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랍니다.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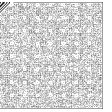
또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산업 업종별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투자계획도 공공 투자부터 더욱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당장 수해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방역 중대본’과 ‘경제 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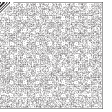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2020. 8. 31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감염 확진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00~300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정세로 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다만 주말까지 확진자 증가를 막아준 것은 대다수 국민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협조하여 외출 등 일상활동을 자제해 주신 덕분입니다. 대다수 교회도 비대면 예배에 협력해 주셨습니다. 많은 불편을 감수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방역협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독서실,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 등 많은 국민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진자가 것처럼 줄었는데도 긴장을 놓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유는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잠복해 있는 불안요인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뉴스 또는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많은 국민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국민께서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큼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8월 20일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열일곱 명 중 다섯 명은 사후 확진자였고, 확진 후 1일 이내 사망자도 네 명이었습니다. 확진자 중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고, 검진이 늦어지고 있는 탓입니다. 이처럼 검진이 늦어지는 것은 자신이나 접촉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경우 익명검사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의 신속한 검사안내에 협조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검진과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금처럼 국민께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경과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따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습니다.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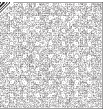
2020. 9. 7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 확산세도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께서는 다시 한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 덕분에입니다. 오랜 기간 연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큼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19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의 코로나19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가 다시 악화되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욱 아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을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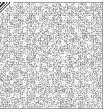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기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대상, 지급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께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큼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드리는 방안 등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정치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당도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말해 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5회 국무회의

2020. 9. 8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입니다.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 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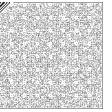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

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 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자못 큼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 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장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입니다.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낼 역량을 갖춰 주길 기대합니다.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협 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9. 14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현실적 방안입니다.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방역의 긴장을 지켜 나가면서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방역조치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때 400명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지였던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르기까지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가 매우 컸습니다. 그와 함께 그 이면에는 국민의 큰 불편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적잖은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강화 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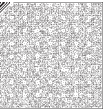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우리 방역체계의 통제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금융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전쟁은 장기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19와 함께 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정부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을 장려함에 따라 추석 시기 택배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인력을 늘려 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제48회 국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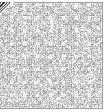
2020. 9. 22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일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면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공들여 쌓은 독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에 전념하였습니다.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었고, 국민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곳곳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주셨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도 오랫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며 헌신해 주셨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됩니다.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입니다. 당분간은 코로나19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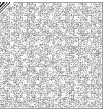
오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청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어려운 국민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온라인 거래와 원격교육 등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세상

이 바뀌고 있지만, 코로나19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도 이분들의 필수적 노동 위에 서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을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 주기 바랍니다. 국민께서도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땅히 존중하며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9. 28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분단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 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

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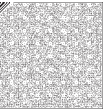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바랍니다.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간 분단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당장 제도적인 남북 협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든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이틀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방역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하며,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쉼표



를 찍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과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1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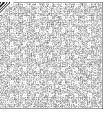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민족 대이동의 기간이었지만 국민께서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셨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일일 평균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1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방역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께서 협조를 잘해 주셨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되었고, 의료진들은 연휴도 반납한 채 코로나19와의 전선을 지켰습니다. 다행스럽게 연휴 내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유지되었고,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경찰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빈틈없이 차단했습니다. 시민께서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안전사고가 많이 준 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해양사고가 대폭 줄고, 인명피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동량이 줄어 교통이 분산된 데다 관계부처의 대비와 국민의 안전의식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경제에 관한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



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9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서고,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방역이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경제에서도 이처럼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은 모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거듭 국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줄었다고는 해도 연휴 기간 동안 이동한 총 인원이 3,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특별방역기간이 이어지고,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힘을 모아 확실한 진정세를 이뤄내야만 지난 2개월 동안의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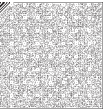
민생과 경제회복의 속도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 덕분에 경제에서도 선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 방역에서 확실한 성과를 만들고, 민생과 경제를 조속히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발표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가 조사 대상국 6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것이고, 2017년보다 열한 계단 상승한 것입니다. 인구 2,000만 명 이상의 나라 가운데서는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정부에서 더욱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도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콘텐츠 역량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콘텐츠 수출은 사상 처

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도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 역량에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이 결합된다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한국을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디지털 강국과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는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 기둥으로서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여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과 콘텐츠 역량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뤄 내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51회 국무회의

2020. 10. 6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에 77%를 집행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더욱 줄여 나가겠습니다.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도 확대하여 생업유지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기를 적기에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자금 지원을 강화하면서 유망 신사업으로 재편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입니다. 중소기업은 코로나19의 직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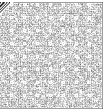
탄을 맞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력 수출 분야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수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고용의 축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창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맵, 마스크 맵, 진단키트 등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기술과 제품이 K-방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혁신만이 살길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은 더욱 절실합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과 소비행태가 바뀌는 환경에 따라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구현은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제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서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혁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체,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디지털 경제 대전환과 제2벤처 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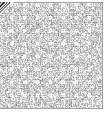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2020. 10. 12

정부는 우리의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은 2단계 조치의 일부를 유지하는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여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특히 오랜 방역 강화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입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저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추석 연휴의 고비도 지금까지 잘 넘겨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방역 완화조치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순간의 방심이 건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께서 유지되는 방역조치와 안전수칙들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이번의 방역 완화조치가 지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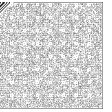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 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국민 덕분입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기 극복 유전자를 가진 우리 국민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많은 국민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 여행·

관광, 예술·문화 등 코로나19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정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을 방역 주체로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 주고, 경제 주체로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10. 19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말이 최근 발표된 9월 고용동향 통계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점진적으로 나아지던 고용상황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서민의 삶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19 재확산이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다시 확대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 시기에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은 신규 채용마저 크게 위축시켜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고용상황 악화로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신 분들, 일시적으로 휴직하신 분들, 특히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일자리 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최선의 방역이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용시장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기 가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3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

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103만 개 공공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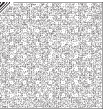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민간투자 지원과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야 고용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8월의 코로나19 재확산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제반등에서도 제약을 받게 된 것이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낙담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2분기보다 3분기에 경제가 더 나아졌고, 최근 방역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며 소비와 내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넘기며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최근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 더하여 내수 회복도 같이 간다면 확실한 경제반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경제반등의 골든타임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배가할 시점입니다. 우선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다방면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방역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상황을 보아 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예술·문화, 여행·관광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반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 집행과 투자 활성화, 수출 회복 지



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과 민자, 공공의 투자계획도 연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 수출이 유럽 등 전 세계의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점인 비대면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정부 지원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께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야 하는 일상입니다. 8월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지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성공과 경제반등의 주체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민과 함께 방역과 경제에서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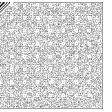
제53회 국무회의

2020. 10. 20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OXFAM)은 코로나19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 해소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입니다. 코로나19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 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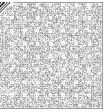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요양보호사·방과후교사·가사도우미·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10. 26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역 완화조치가 지속되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일상활동에 기지개를 펴고, 단풍을 즐기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조치를 통해 집합금지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적극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시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일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한 달 전 27%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1% 정도까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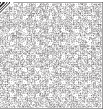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한편으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 확진자 수가 일시 늘어난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전수조사는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사망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고, 조용한 전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방역체계가 철저하고 빈틈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의 일시적 등락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과 함께 소비, 외식, 관광, 공연, 전시, 문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께서도 소비진작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비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 당국은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 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께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21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입니다.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아동보호 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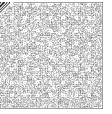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2020. 11. 2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우리 경제가 1, 2분기 동안의 급격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의 산업활동에서 생산·소비·투자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낸 것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심리도 10월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소비심리지수, 기업경기지수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는데, 모두 11년 6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입니다. 이 역시 경제회복의 속도가 높아질 것을 예고하는 청신호입니다.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끄는 주역은 단연 수출입니다. 한국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은 지난 3분기에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10월 수출실적에서도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업일수가 줄어 월간 총수출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일평균 수출액이 코로나19 이전인 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고, 13개월 만에 최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제교역의 위축 속에서 이런 매우 값진 성과로, 우리 경제를 조기에 반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 주는 실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세계 각국이 봉쇄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내수 진작과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등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방역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노력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이 모여 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고 4분기에도 경제반등의 추세를 이어 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을 만회하고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면목을 발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이 재발견되었고,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 속에서 그 진면목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제조업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서비스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기적 같은 선방을 하게 된 것은 제조업 강국의 튼튼한 기반 위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활발한 생산과 수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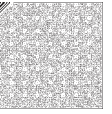
10월 수출의 눈부신 실적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일평균 수출액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바이오·헬스는 10월까지의 수출실적만으로도 사상 첫 연간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4대 시장인 미국, 중국, EU, 아세안 모두에서 25개월 만에 일평균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의미가 큼니다. 주력 대기업과 중소 제조업체들이 함께 수출로 위기를 타개하

면서 기회를 만들어준 덕분입니다. 기업인과 노동자, 노사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제조 강국의 미래를 위한 벤처투자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분기 동안의 부진을 딛고 3분기에 지난해에 비해 6%나 증가한 것은 제조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자 우리 경제에 변함없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 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잘하는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 강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듯이,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교훈 삼아 우리 제조업을 한층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더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강점인 첨단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통 제조업 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기둥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이 제조업 혁신을 더욱 촉진시키면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제55회 국무회의

2020. 11. 3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EU는 지난해 그린 딜(Green Deal)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중국은 2060년, 일본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의지를 담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석연료 의존이 높으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직 낮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대체에너지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히 도전에 나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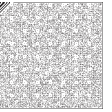
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추동하면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저탄소 경제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습니다.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오히려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재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혁신 전략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건물과 수송의 저탄소화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재사용을 최대화하는 순환경제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전략으로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추진 체계부터 힘있게 구축할 필요



가 있습니다.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 가고 있는 서울·광주·충남·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산업계와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정부에서 노력이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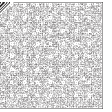
2020. 11. 9

바이든(Joe Biden)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amala Harris)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미국의 오랜 민주적 전통과 법치주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가치 위에서 선거의 마지막 과정을 잘 마무리하리라 기대합니다.

나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치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고,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세계적 현안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 대선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간 안보협력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마지막까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간 현안도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해야 할 일



은 미루지 않고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 간의 굳건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 협력해 왔고,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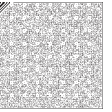
강력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축은 탄탄한 경제협력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자와 다자 통상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협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큼니다. 이렇게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 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일본 1,000명, 독일 2만 명, 프랑스 6만 명, 미국은 12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확

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확진자 수가 5,0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사망자가 1만 명을 넘는 날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내 감염자 수가 100명 내외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입니다.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우리 역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최근 밀집·밀폐 장소에서의 집단감염과 지인 모임 등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국민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좋은 조건인데다 이동과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큼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겨우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철저한 생활방역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며,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국무회의

2020. 11. 17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존중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입니다.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

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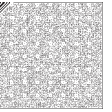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300명 가까이 증원하여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그중에서도 추락사의 위험이 높은 중소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시에 점검하는 현장 순찰 방식을 도입했으며, 건설안전 지킴이를 투입하여 상시 점검과 예방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설비 설치 비용 등 재정지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산업안전 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많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기초단체별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린 조치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영업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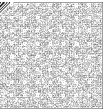
2020. 11. 30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2020년 한 해가 한 달 후면 저물게 됩니다. 1년 내내 신종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민생경제도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어려움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며 위기를 극복해 왔고,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각국의 1년 성적표가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간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에 총력을 다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도전에 더욱 힘을 실어야겠습니다.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께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 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GDP 규모 10위권 국가라는 평가를 넘어서서 어느덧 민주주의에서도, 문화에서도, 방역과 의료에서도, 소프트 파워에서도, 외교와 국제적 역할에서도 경제 분야 못지않은 위상으로 평가받고 있고, 어느덧 G7 국가들을 바짝 뒤쫓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께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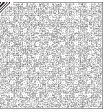
12월로 들어서는 이번 주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어야 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며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일 전을 정점으로 확진자 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가 조성된 것은 매우 다행입니다. 방역 고삐를 더욱 조여 조기에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성공적인 수능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하며 모든 돌발 상황에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국민께서도 학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수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불안한 방역상황 때문에 전국 단위의 국가시험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러낸다면

K-방역의 우수성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1년 내내 어렵게 공부하고 수능시험까지 불편 속에서 치르게 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59회 국무회의

2020. 12. 1

오늘 발표된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반등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올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부동의 1위를 지켜내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3분기부터 시작된 경제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심리부터 좋아졌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지수 모두 크게 개선되어 11월 경제심리지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경제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합니다. 지난 10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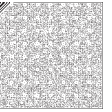
수출액과 함께 수출의 내용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분야와 경쟁력이 강한 IT·제조업 부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이 수출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 주는 현상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1,8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액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주가라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경제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좋은 흐름을 보이며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큼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슷한 고비를 넘으며 이겨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고, 내년에도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 모든 부처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에 힘이 되고, 코로나19로 힘겨운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2021년 예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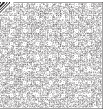
2020. 12. 7

지난달 19일과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달아 격상한 데 이어 또다시 2주 만에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합니다. 그동안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 강화조치의 성과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방역조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코로나19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건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께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특히 절실한 때입니다. 마스크 쓰기, 밀접 접촉 자제와 같은 방역의 기본만 잘 지켜도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국민께 당부드립니다. 지난 추석에 우리는 몸은 못 가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로 방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방역에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나는 참으로 고단한 한 해입니다. 이미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6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방역에서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수확능력시험까지 무사히 치러낸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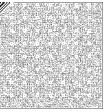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 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역량, 외교적 위상 등 소프트파워에서도 빠르게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까마득히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의 먼 미래처럼 보였던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크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분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12. 14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큼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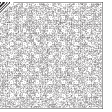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큼니다.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0월부터 일평균 수출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12월에도 제조의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에서도 호조를 보여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도 매우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 주는 주가의 상승세 또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여 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이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임



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벤처기업이 약진하면서 제2벤처 붐의 확산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 총액 상위 20위권 내의 벤처기업이 13개로 증가하여 비중이 65%로 커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4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입니다. 제2벤처 붐이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길도 우선 여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출 물량이 있어도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부족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총력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수출 지원에도 힘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 원화 강세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을 대전환하면서 미래 성장동력과 미래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미래 투자에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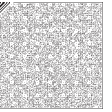
제61회 국무회의

2020. 12. 15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 왔던 국민으로서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습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정부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청원을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김대중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었다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온 것입니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이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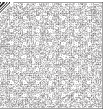
한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큼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께서는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국민의 기구, 국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0. 12. 28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입니다. 내년이면 집권 5년 차를 맞습니다. 정부는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초심을 되새기며 심기일전하여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방역으로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도 않아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역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고 힘을 모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격리치료를 더욱 강화하여 반드시 확산세를 꺾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지금의 양상은 마치 코로나19의 확산력과 우리의 방역 역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께서도 코로나19를 꺾을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해 주시고, 한 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년 내내 코로나19 속에서 살면서 우리 국민 모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0만 명, 사망자 수가 170만 명이 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대응해 왔습니다. 덕분에 경제적 충

격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적은 충격으로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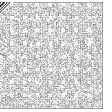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흔히 신속한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로 이어지는 3T를 꼽습니다. K-방역의 3T는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더 높게 평가하며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강력한 봉쇄를 거듭하면서도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국민의 높은 협조와 참여야말로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진정한 K-방역의 성공 요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평균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는 동안 미국은 일평균 23만 명, 영국은 3만 4,000명, 독일은 2만 5,000명, 일본은 2,800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함께 한마음이 되어 거두고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1년 내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께 최고의 경의와 감사를 바칩니다. 국민께서도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의 전략과 목표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우리는 당초의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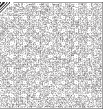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투명한 정보의 공개입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도입을 위한 협상과 계약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보안 외에는 정부의 방침을 그때그때 밝혀 왔고, 그 방침대로 하나 하나 실현되고 있는 것을 국민께서 보고 계십니다.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백신 주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백신, 치료의 세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국산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아직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지만 치료제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그동안 밝혀 왔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에 빠르게 성공한다면 코로나19 극복의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방역 선도국가에서 더 나아가 방역·백신·치료 세 박자를 모두 갖춘 또 다른 모범국가가 되어 세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격변의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우리가 방역과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께서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과 사망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충격으로 생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 얼어붙은 취업 상황과 실직, 무급휴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것이며, 전력을 다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험난한 시기를 꿋꿋이 견디며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보게 된 특별한 한 해

였습니다. 올해의 특별한 경험과 교훈을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키겠습니다. 더 나아가 위기에 강한 나라답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께서 이 길에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63회 국무회의

2020. 12. 29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위기 극복에 헌신해 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와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 모범 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19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목표입니다. 또한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19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내몰렸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은 더 힘든 생활고에 직면했습니다. 노동·돌봄·교육 등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경제회의와 경제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민생금융안정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10조 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며 국민의 경제적 기반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였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가장 빠른 경제반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 벤처기업들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키운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더욱 키워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 강국, 제조 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문화 강국, 소프트웨어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미래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습니다.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19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입니다.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한시가 급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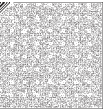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 드리기 위해 저금리 용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 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2021



제1회 국무회의

2021. 1. 5

2021년 첫 국무회의입니다.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코로나19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감염 재생산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일상을 멈추는 어려움을 감내하며 방역조치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식약처의 허가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19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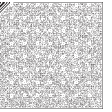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큼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돌봄 격차, 교육 격차 등 코로나19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주거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과제입니다.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을 1위를 기록할 전망이고, 수출 반등세도 이어져 12월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분야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로 성장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어 미래전망을 더욱 밝게 합니다.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또한 역대 최고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진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를 최대한 살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 도약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습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으로 세계의 모범을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 역량이 세계의 자긍심이 되며, K-브랜드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고 있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재발견했습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를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듭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2. 1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참으로 속상합니다. 특히 영업시간을 한 시간만이라도 늘려 달라는 요구조차 들어 드리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또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교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방역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국민께서 그 같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반드시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꺾고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방역에 큰 부담이 되었던 비인가 종교·교육시설과 요양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준비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 백신공급 연합체인 코백스(COVAX)의 백신물량 배정에 의해 일부 백신 품



목을 더 일찍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부 백신 품목은 국내 제약회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께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뿐 아니라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전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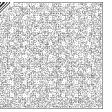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설 명절을 맞이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며 미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함께 조류독감 등으로 힘든 농가가 많습니다. 국민께서 우리 농축수산물과 전통시장을 애용해 주신다면 어려운 농어촌을 도우면서 내수와 소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자칫 불안해질 수 있는 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대 핵심 성수품을 설 연휴 전에 집중 공급하고, 계란 등 축산물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급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역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정부가 특별히 기울여야 할 노력은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그늘 속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고, 특히 후진적이며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하는 등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했지만, 체감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 예방기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제5회 국무회의

2021. 2. 2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세기적 재난을 맞아 각 나라 정부는 사력을 다해 위기탈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당당히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에 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위기 극복 모범 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 강국, 수출 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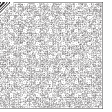
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룬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입니다. 이미 세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것 자체로 생존의 문제가 되었으며,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 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규제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的时间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 데서도 소외되는 계층·지역·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정책에



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
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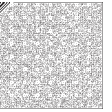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2021. 2. 8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 종식 없는 ‘with 코로나19’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찾는 일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실로 막대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습니다.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 주었습니다.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



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합니다.

다른 지표에서도 특기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국가신용평가와 기업활동평가에서 새롭게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친환경,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을 나타내는 ESG 국가별 평가에서 한국을 미국·영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1등급의 최고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사회책임 투자와 지속가능 투자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얻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역량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쟁쟁한 나라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산업성장과 제조업 부가가치, 연구·개발과 국제특허 실적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역량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 주는 결과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결합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우리 정부 들어 열여덟 계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며 역대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위기 극복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이룬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께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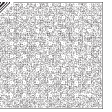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 지역균형 뉴딜에 가속을 붙여 나가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신산업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양질의 일자리와 주민 수익 창출 등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 산업 전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면서 전기차 분야와 수소경제 등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는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저탄소 기술혁신을 국가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신종 감염병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없습니다. 방역 대책으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습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습니다.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2. 15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방역상황이 우리 방역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의 통제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특히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19와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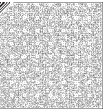
찾아야 합니다.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제7회 국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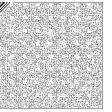
2021. 2. 16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입니다.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악화도 지속되었습니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민간의 일



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더욱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110조 원 규모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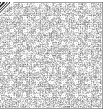
둘째,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생계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특히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2. 22

드디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잃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에 모두 힘을 모아 주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이 예정돼 있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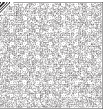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가계소득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에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경제활동 위축과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소득 불평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워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포용의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경제회복과 도약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 주는 주역은 단연 벤처·스타트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신설법인 수와 기술창업이 증가했고, 벤처투자자와 벤처펀드 결성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기업가치 1조가 넘는 유니콘 기업은 우리 정부 들어 10개가 증가하여 13개가 되었고, 예비 유니콘 기업 수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 3,000시대를 열며 주식시장의 성장을 이끈 동력 역시 벤처기업입니다.

특히 고용의 축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벤처기업은 오히려 5만 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났고,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72만 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질 면에서도 ICT, 바이오·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벤처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벤처가 우리 경제의 미래이며 일자리의 새로운 보고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면서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디지털·비대면 기반의 3세대 혁신기업을 키워 나가면서 유니콘 프로젝트 등 벤처 강국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도약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벤처 창업가들의 기부행렬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벤처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어 매우 뜻깊습니다. 자수성가하여 이뤄낸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에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혁신적 창업가들의 기부문화와 함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 변화입니다. 기업인들이 존경받으면서 기업의 가치도 동시에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벤처 창업가와 기업인들의 실천이 사회연대기금 등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이며 품격 높은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9회 국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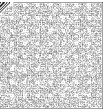
2021. 3. 2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면역을 차질 없이 이뤄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 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입니다.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서도 모범국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집니다.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면역이라는 중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장



기화와 방역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4조 5,000억 원을 더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6조 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습니다.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습니다.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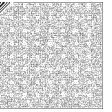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사건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입니다.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해원(解冤)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입

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도 대단히 의미가 큼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조합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3. 15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이루어 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 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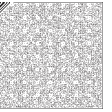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 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입니다.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2·4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경제도 국제기구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 조정되는 등 회복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도 지금까지 25% 이상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품목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가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어 더욱 희망적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정부의 강력한 재건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조선업은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각 부처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와 고용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내수와 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안정과 고용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사업과 함께 청년·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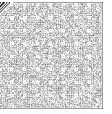
제11회 국무회의

2021. 3. 16

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5,000개가 넘는 우리나라 국가 법령 중에 행정 법령이 4,600여 개가 되는데도 그동안 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 다. 인허가·과징금 등 국민 생활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개별법에 각기 달리 규정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고, 행정소송이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도 컸습니 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성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께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적극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확대하고, 처분의 재심사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습니 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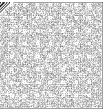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을 만드는 데 특히 법제처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행령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력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

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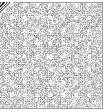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도 접종을 재개했고, 우리 질병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와 아내도 오는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정상회의 수행원들도 수행이 확정된 인원들은 내일 함께 접종을 하고, 그 밖의 인원들도 수행이 결정되는 대로 접종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면역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 접종시스템이 가동되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초기 접종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1차 접종 대상 전체 신청자 중 이미 93%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지난 주말부터는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수급도 원활히 진행되면서 2분기에는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의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강하게 경제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기구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상향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두국가 그룹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방역상황과 맞물리면서 내수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대면서비스업종도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소폭 반등하는 등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방역 관리와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상황도 개선의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53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1월을 저점으로 확실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3월부터는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회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종별로 고용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자리 수급의 불균형과 구인과 구직 사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용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서민을 위한 2·4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제14회 국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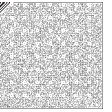
2021. 3. 30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19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에 더 낮추게 되었습니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
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
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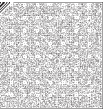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금
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 원을 지원하여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
대출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
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
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에서는 ‘햇살론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카드’를 출시합니다. 은행 대
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
다. 한편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뿐 아니라 채무조
정제도, 연체이자 제한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
난 3년간 25조 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총 213만 명
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 같은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말 94만 명이 넘었
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월 8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
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
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 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
울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
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융 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금
융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4. 5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방역과 백신 접종에 달렸습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코로나19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미 확진자 수가 1억 300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유럽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유행 양상마저 보이면서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를 다시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연일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걱정이 큼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우리가 관리해 온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 할 상황입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접촉과 이동이 늘어나는 계절을 맞아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방역 방해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 준수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방역을 위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시면서도 방역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조치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또 다른 걱정은 백신 생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생산국들이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서 백신 수급 상황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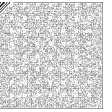
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할 계획입니다.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돌봄 종사자들,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들, 만성질환 환자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사들과 고3 학생들의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경제에서는 각종 지표들이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국민의 삶이 당장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반등의 흐름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2월 산업생산은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어려웠던 서비스업생산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역시 3월 수출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증가했고, 품목별로도 15대 주력 품목 중 14개 품목이 증가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떨쳐냈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의 위상을 압도적으로 되찾은 것은 물론 혁신벤처와 신산업이 경제 반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경쟁력을 보여 주고 있는 것도 매우 큰 성과입니다.



경제심리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반등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제조업과 비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오름세를 보이며 산업 전반에 회복의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낸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는 경제반등의 추세를 힘있게 이어가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회복의 흐름을 국민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을 두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계층에 힘이 되는 포용적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산업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활동 지원과 규제혁신에 더 속도를 내어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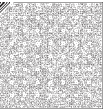
제16회 국무회의

2021. 4. 13

정부는 국민께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정에 임해야 합니다. 방역도,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한순간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께서 의지할 수 있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직장을 잃고 재취업의 길을 못 찾는 실직자들,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코로나19의 직격탄 속에 월세 내기도 버거운 자영업자들, 아르바이트를 찾기도 힘든 대학생들과 청년들, 무거워진 육아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국민께서 아직도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 속에 힘겹게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들이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가혹하다는 말이 회복 국면에서도 가슴 아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코로나19 충격으



로 무너진 국민께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돼도 없어진 일자리가 금방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문을 여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줄어든 가계소득을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에게는 단기 일자리라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고용지원금이나 교육·훈련 지원도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단비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경제회복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지고 코로나19 불평등을 줄여 모두 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단힌 취업 문과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IMF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 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19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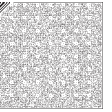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록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유산이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들어 「청년기본법」을 만들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

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제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이 기회에 민간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망한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일할 청년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디지털·데이터·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등 미래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또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민생문제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21. 4. 19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지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는 더불어 잘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경제·사회구조를 대전환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고용·사회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로 진화해 나가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평화의 신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쟁의 위기를 견어내고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대화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잠정적인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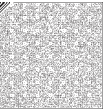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위기에 더욱 강한 우리 국민의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 선진적 방역체계와 적극적 재정정책 등이 어우러지며 세계적으로 방역에서 모범국가,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그룹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국가적 위상이 높아져서 G7 정상회의에 연속적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되었고, 1인당 GDP에서 G7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국민적 성과, 국가적 성취는 국민께서 자부할 만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방역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습니다. 경제는 고용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싼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당과 정책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야당과의 소통에도 힘써 주기 바랍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부터 입법에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방자치단체와도 특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



립니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슬아슬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기업과 소통과 지원도 더욱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나라 간에 경기회복 국면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래산업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기업들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며칠 후 기후정상회의가 열리고, 5월 말 한국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5월에는 한미정상회담도 계획돼 있습니다.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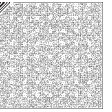
수석·보좌관회의

2021. 4. 26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어느 한 나라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한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그와 같은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하여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판단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집단면역의 목표 시기, 접종 계획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신을 안배하여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계약된 시기에 백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처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고, 그에 따른 접종순서와 접종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목표로 4월 말까



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의 접종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4월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면역도 더 앞당기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백신 수급 불안요인에 대비하고, 접종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Pfizer) 백신 4,000만 회분 추가 구매계약 체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필요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확보한 백신 외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국제동향과 효과 및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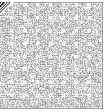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생산 능력과 특수주사기 생산능력 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도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히려

더욱 늘어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도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되고 있다고 해서 방역의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며,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되고, 국산 치료제가 활용되고 있는 덕분에 위중증 환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방역 관리를 강화하면서 백신 접종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 이중의 업무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만이 해결책입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계속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8회 국무회의

2021. 4. 27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기구들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처음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한 것입니다.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더욱 강한 한국 경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GDP 규모에서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고, 빠른 경제회복을 이끄는 세계 선도그룹이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더욱 강해진 것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가 되어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출과 투자, 민간소비, 재정 모두가 플러스 성장하며 1분기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모아 주신 국민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의 경제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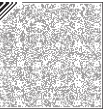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카드매출액도 크게 늘고 있는 등 소비도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에서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양적인 면에서 보여 주는 경제회복의 실적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2벤처 붐의 확산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경쟁력을 보여 주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경제 반등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회복도, 도약도 포용 없이는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고용상황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과 도약으로 코로나19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은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입니다. 판문점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합니다.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수석·보좌관회의 / 국무회의)
2020. 5. 10 ~ 2021. 5. 9

발행	대통령비서실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편집·디자인	주식회사 서재
인쇄·제본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소
발행일	2021년 6월 18일

